

# 서울시, 신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대응 위해 경제 위기 점검과 경제 외적 전환·혁신 필요

## 신3고 현상, 경제적 원인 이외 글로벌 경제구도의 재편과 탈세계화 야기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3고 현상은 경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구도 재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연관되어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의 탈세계화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체제와 자유무역체제에 마비를 초래해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양적 완화, 연준의 빅스텝은 인플레이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우리나라와 신흥경제국가들의 자본유출을 증대시켜 환율상승을 압박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로 화석연료 개발이나 관련한 신규투자가 제한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에너지 및 식량의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가격이 잇달아 올랐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신3고 현상은 국제정치와 경제적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신3고, 복합적 특성 지닌 문제의 위험 중층화로 전 분야의 복합위기로 확산

이번 신3고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복합위기와 같이 좁은 범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 하강을 유발한다. 소비자물가가 오르고 이자상환금이 늘어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어 소비위축을 초래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비용부담으로 인력을 감축하면 가계의 근로소득이 감소해 결국 가계소득과 소비가 위축된다. 가계의 구매력 저하는 기업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고물가로 인한 비용 증가는 기업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킨다. 투자

여력의 감소는 신규투자를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하락시킨다. 특히 건설기업이 고금리로 인해 대규모 자본조달이 어렵게 되면 건설부문이 침체되고 사회 간접자본과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가계의 소득감소와 소비위축, 기업의 인력감축에 따른 실업 증가는 취약가구의 돌봄 공백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고환율에 따른 에너지 수입 비용과 재생자원의 가격 상승은 물가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가계와 기업의 활동이 줄어들면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경기 침체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정부가 복지비나 신용공급 지원 등의 세출을 증가시키면 적자재정이 더 심화돼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이처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 하강을 유발할 수 있다.

## 2023년 세계경제 불안정성·변동성 커져…신3고 복합위기, 파급경로에 주목해야

통계청은 2023년 6월, 공급충격의 일부가 완화돼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진입하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의 둔화가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생활물가 중 식품, 외식, 에너지 비용의 부담이 크다. 또한 물가는 하방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인상된 수준에서 내림세가 크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2023년은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견되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더불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일어나 경기에 민감한 환율과 유가는 당분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와 파생된 문제들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는 과정에 있고,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과정은 불안정성이나 변동성 등이 커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신3고가 촉발한 위기는 이전의 경제위기와 달리 경제 외적인 분야에까지 파급되고 있어 현상보다는 파급 경로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외적 기반의 리스크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그로 인해 취약성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서울시, 신3고 이후 경제 분야뿐 아니라 경제 외적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해야

서울시는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경제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가

동하였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고, 코로나19 시기에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 영역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신3고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도시인프라 사업 차질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공공요금 인상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탄소중립 등 경제 외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경제 외적 분야의 취약성은 경제 성장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부정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경제 외적 분야의 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신3고 이후 재정 악화가 예견된 가운데 기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확대나 강화보다는 선별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신3고는 경제·돌봄·인프라에 부정적, 환경에 기회…서울시, 분야별로 대응해야

경제분야에서는 가계·기업·소상공인의 부채 증가 속도와 부채 상환 능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소득계층별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점검한 결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취약가구의 부채와 연체가 늘고 원리금 부담으로 식비 지출까지 줄이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채는 만기 연장 등으로 현재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누적된 부채는 숨은 뇌관으로 작용해 다음 경제위기 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돌봄과 재정, 도시인프라 분야는 기존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3고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견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차원의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은 신3고를 기회로 삼아 성장동력화를 위한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재정은 위험대비, 환경은 적극추진, 인프라는 공동대응 등 분야별 전략 필요

분야별 세부과제별로 도출한 대응 방향을 주체, 시기, 상황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재정사업 원점 평가와 효율화, 재생자원시장 비상 대응 체계의 수립, 가계·기업·소상공인 대상 부채 모니터링은 단기간 내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3고 현상에 따른 세수 결손은 재량 지출 삭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량

지출을 원점에서 평가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해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재생자원과 관련해서는 재생자원시장의 비상 대응 체계를 재정립해 재생자원 가격 변동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부채를 경계하기 위해 부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이자 지원이나 생계비 대출을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3고 이후 전략적으로 집중하되 중·장기적인 계획과 추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건물 탈탄소화와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들 수 있다. 온실가스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에 대해 BRP 사업 추진 시 중간 조직을 구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민간건물의 온실가스 총량제 이전에 건물 유형별 표준배출량 및 패널티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주택사업과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주택 매매시장 및 임차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공급 감소와 임차시장 불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돌봄에 보편화·형평성 제고와 기업·소상공인에 맞춤형 선별 지원이 필요

기존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3고 현상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지원 확대 혹은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임금근로자 혹은 양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공보육을 비정형 근로자나 고용보험 미가입자, 한부모 가구에까지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육아휴직의 보편화를 위해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부모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고, 한부모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액수와 기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채는 여러 정책 지원들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 부분의 변수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산업별 혹은 역량별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역량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선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